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미국,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
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

북한포커스

체제전환국 지식공유 사례 및 시사점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미국,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	1
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	3

북한 포커스

체제전환국 지식공유 사례 및 시사점	6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9
--------------------	---

미국,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 경 수 (yksoo@kdb.co.kr)

- ◆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 정책당국은 CARES Act에 의거,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(Paycheck Protection Program)을 도입
- ◆ 급여보호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청 보증부 대출(PPP대출)을 제공하면, 연준이 PPPLF를 설립하여 PPP대출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, 정책당국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에 직접 개입하는 점이 특징

□ 최근 미국 고용지표는 큰 폭 악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주요 IB들은 향후에도 고용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(최근 지표) '20.3월 미국 실업률은 전월대비 0.9%p 상승*한 4.4%를 나타내었으며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전월대비 70.1만명 감소하여 시장 예상치 큰 폭 하회
 - * '75.1월 이래 월간 기준 최대 상승폭 시현
 -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수도 661만명(4월 첫째주 기준)으로 급증
- (향후 전망) 주요 IB들은 실업수당 청구자수, 정부의 자택대기 조치 시행 등을 감안시 향후에도 고용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HSBC는 최근 3주간의 실업수당 청구자수 등을 감안시 매주 약 3%p정도의 실업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, Morgan Stanley는 2분기 취업자수 감소폭을 2천만명 내외로, 실업률은 10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

□ 미 정책당국은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위해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실시

- (개요) 급여보호 프로그램(Paycheck Protection Program, 이하 PPP)*은 CARES Act에 의거, 일시 시행되는 미국 중소기업청(SBA)의 보증부 신규 대출프로그램을 의미
 - * 미 의회는 3.27일 제정한 CARES Act에 피해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3,490억달러 규모의 급여보호 프로그램(PPP)을 신설
- (운영방식) 금융기관이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 등에게 PPP대출을 실행하고, 중소기업청은 3,490억달러를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PPP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
 - 금융기관은 소재지역의 연준에게 PPP대출을 담보로 제공
 - 지역 연준은 PPP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게 동 대출을 담보로 대출 제공*
 - * 연준은 담보대출 실행을 위해 PPPLF(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Facility)를 신설

○ PPP대출의 주요내용

- (대상 및 적격용도) 직원수 500명 이하 소기업, 개인사업자,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급여비용(Payroll cost)*, 모기지이자, 유틸리티비용(전기 등) 용도로 제공
 - * 급여, 팁, 유급휴가비, 직원혜택(건강보험료, 퇴직연금 등), 주·지방정부 급여세 등
- (규모 및 한도) 월평균 급여비용*의 2.5배, 최대한도 1천만달러
 - * 급여비용은 직원 1명당 연간 10만달러까지만 인정
- (금리 및 기간) 1%의 고정금리, 대출기간 2년
- (담보 및 보증) 중소기업청 100% 보증부 대출로, 담보 및 보증이 요구되지 않음
- (채무면제)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8주간 사용액만큼 대출금 상환 면제*
 - * (면제조건) 대출금의 적격용도 사용
 - 단, 면제금액은 직원수 감소 및 급여 삭감 시 감액

○ PPPLF의 주요내용

- (대출대상) 중소기업청의 보증부 PPP대출
- (적용금리 및 대출금액) 35bp, 담보로 맡긴 PPP대출의 원금
- (자본규제) PPP대출은 은행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제외(가중치 0 적용)
- (운영기간) '20.9.30일까지, 연준과 재무부 결정으로 연장 가능

□ 급여보호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

- 금번 코로나19사태는 인적·물적이동 제한, 공급사슬상 애로 발생 등의 특성상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에 큰 타격이 예상
 - 미 행정부는 의회에 급여보호 프로그램의 증액을 요청(4.7일)하였으며, 이는 고용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
- 미국 정책당국은 보조금 성격이 가미된 PPP대출을 통해 직원의 급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안정 노력 경주
 - 특히, 채무면제 조항을 통해 개인 앞 현금지급 조치와 유사하게 통상적 금융 지원 수준 이상의 직접적 효과 추구
- 연준의 PPPLF와 중소기업청 PPP대출 보증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점도 주목할만한 특징
 -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, 담보대출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타 유동성 공급기구들과 차이
 - 또한, 자기자본규제시 예외조항까지 신설하여 금융기관들의 대출실행을 장려

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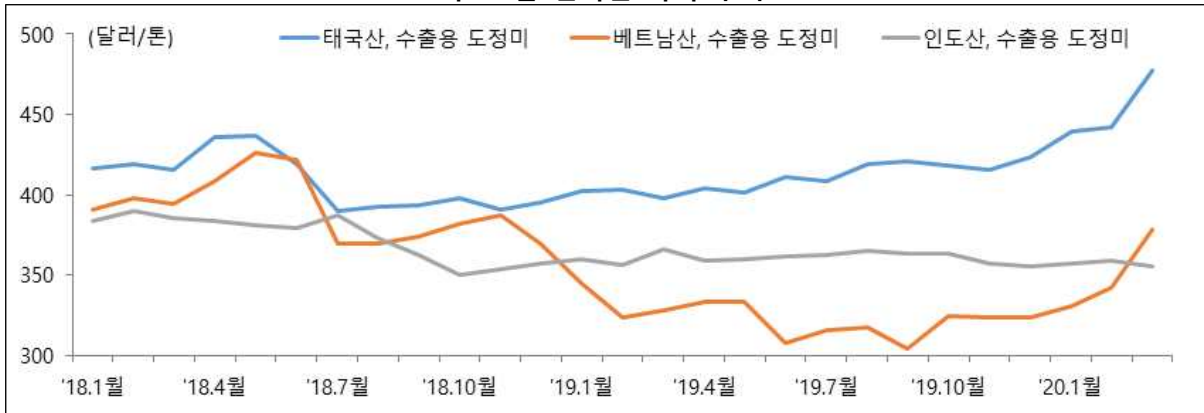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정 석 완 (kdbcsw@kdb.co.kr)

- ◆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봉쇄, 물류 중단, 방역 강화로 인하여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으며, 식량수입국인 한국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
- ◆ UNFAO의 권고사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, 비상시 품목별 확보 방안을 계획하는 등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함

□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식량 부문의 수급 불균형 우려 확산

-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, 식량 수출국을 중심으로 물류난 및 수급 불균형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
 -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3주간의 사회적 봉쇄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물류 중지를 이유로 쌀 수출이 중지된 상태이며, 유럽 최대의 곡물수출국인 프랑스에서도 내부적인 수요 폭증과 물류난이 중첩되어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
- UN식량농업기구(UNFAO)는 5월경 본격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인도와 베트남의 쌀 수출 중지로 쌀 가격 지수는 이미 3월부터 상승 국면
 - UNFAO는 환율 변동까지 식량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식량 수입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,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대두

주요 쌀 산지별 가격 추이



자료 : UNFAO

□ 한국은 주요 식량품목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량수입국

- 식량 관련 교역품목 중 곡물·곡분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무역수지 적자
 - 육류, 곡물, 어패류 등 기초 재료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 세계적인 식량 충격이 올 경우 수급 조정에 취약
 - * 2017년 기준 곡물자급률(사료용 포함)은 쌀(94.5%)과 감자·고구마류(95.2%)를 제외한 곡물 전 품목에서 30% 미만(옥수수 0.8%, 밀 0.9%, 콩 5.4%, 보리쌀 24.9%, 기타 9.3%)

식량 관련 교역품 무역수지('19년 기준)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식량 충격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

- UN식량농업기구 10대 권고사항의 내재화 필요
 - 취약계층의 대응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10대 권고사항을 국내 사정에 맞게 조정*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 필요
 - * 예) 사재기 방지,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, 온라인 개학 상태에서의 급식 제공 등

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 대비 UNFAO 10대 권고사항



자료 : UNFAO, 당행 재구성

-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공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
 -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우며, 품목별로는 장기간 비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, 민간 부문의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정체계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
 - 개인의 영양상태는 면역력과 감염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며, 거시적으로 방역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식량의 생산 및 도입, 보관, 공급, 분배 전 분야에 걸쳐 공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접근 필요
 - 주요 식량수출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동시에, 영양 측면의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 마련

주요 수입 식량품목의 수입국 및 수입액('19년 기준)

(단위 : 백만달러)

식용 고기와 내장			곡물			어패류		
순위	국가	수입액	순위	국가	수입액	순위	국가	수입액
1	미국	5,231	1	미국	1,071	1	중국	1,086
2	호주	2,370	2	브라질	746	2	러시아	920
3	독일	348	3	아르헨티나	598	3	베트남	584
4	스페인	278	4	호주	345	4	노르웨이	412
5	브라질	244	5	우크라이나	215	5	미국	229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체제전환국 지식공유 사례 및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박정은 (pje511@kdb.co.kr)

- ◆ 국제금융기구는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의 경제·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단순 자금원조 뿐 아니라 정책수립 자문 및 역량강화 지원 등 지식공유 실시
 - 우리 정부도 '04년부터 한국 고유의 발전경험을 활용한 지식공유사업 수행
- ◆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제고 및 참여 확대, 나아가 공여국-협력대상국 간 상호 지속 가능발전 도모,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식공유 강화 필요

□ 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주요 어젠다로 지식공유(Knowledge Sharing)를 지속 강조

- '00년대 이후 등장한 지식공유 개념*은 기술원조(Technical Assistance)와 유사하나 단순 원조를 넘어 협력대상국의 지식·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개발 중시
 - 최근 국제개발협력은 지식협력의 중요성에 주목, 지식공유사업 강화 추세
 - * G20('13)에서는 지식공유를 '하나 혹은 여러 국가들에서 성공한 개발모델이나 솔루션을 협력관계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전하는 것'으로 정의

- '15.9월 UN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적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, SDGs)에서도 지식공유 강조
 -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세부목표로 국가간 협력 및 지식공유 확대,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 등의 이행 촉구
 - * 총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하나로 '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' 채택

□ World Bank, ADB 등 국제금융기구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 추진시 개발전략 및 정책에 관한 지식공유사업을 포함하여 진행

- World Bank와 ADB는 각각 ASA*, ESW**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협력 사업 추진시 지식공유 활동 수행
 - 대상국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·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설계·실행 관련 자문 제공
 - * World Bank의 ASA(Advisory Services and Analytics) : ① 대상국의 경제·사회 분야별 현황 연구, ② 정책실행 지원을 위한 비차관 기술원조, ③ 역량강화훈련 등으로 구성된 지식서비스 제공 사업
 - ** ADB의 ESW(Economic and Sector Work) : 대상국에 대한 분야별 분석 및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, 주로 기술원조 사업과 함께 진행

- World Bank는 베트남 개발협력시, '07년 이후 정책·제도 개혁 지원단계에서 차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분야별 심층연구 및 정책자문 제공 등 진행
 - WBIEG(World Bank Independent Evaluation Group)는 프로젝트 전략 설계 및 효과적인 차관 사업 진행 등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평가
 - *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체계는 없으나,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 평가

□ 우리 정부는 KSP(Knowledge Sharing Program)* 사업을 통해 체제전환국의 전환 이후 경제·사회제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 수행

* 한국 고유의 경제·사회 발전경험을 활용하여 협력대상국의 제도 구축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사업(기획재정부 주관)

- '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, '16년 기준 21개 체제전환국 포함 총 59개국을 대상으로 KSP 수행
 - 주로 산업, 거시경제, 과학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, 대상국가별 경제발전 현황 및 산업구조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정책우선순위 차별화
 - * 기획재정부-KDI('19), "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"
 - 특히 베트남, 우즈베키스탄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정책자문 수행, 국가 개발전략에의 주요 제언내용 반영 등 우수한 성과 달성

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) 사례

국 가	연 도	주 제
베트남	'04	- 개발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· 공기업 개혁과제, WTO 가입준비, 외자조달방안 등
	'09 ~ '11	- '11~'20 베트남 경제사회 개발전략 · 금융정책, 국토이용전략, 산업기술개발전략, 기업정책 · 공공부문 인력양성,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, 중소기업금융 · 공항·항만 현대화전략, 국영기업 평가시스템
	'12	- 공공투자 효율성 제고, 신도시개발 자원조달방안, 노동수요 전망 등
	'13	- 에너지정책, 공공주택정책, 환경보호법 개정 지원 등
우즈베키스탄	'04	- 제조업 육성과 수출 촉진방안 · 산업개발·수출진흥정책, 거시금융정책, 재정개혁 등
	'09	-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 설립
	'10	- 혁신기반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· 수출촉진정책, 수출금융, 통화정책 운용체계, 중기 재정운영계획
	'11	- 국가혁신시스템의 강화전략 · 과학기술정책, 기술이전·사업화 정책, 지역혁신시스템 구축방안
	'12	- 재생에너지 개발, 에너지 효율 향상 전략,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
	'13	- 농업 및 산업기술 혁신전략

자료 : KDI 국제개발협력센터

- 베트남 대상 KSP는 초기에 경제·금융 제도 구축에 집중하고, 이후 공공부문, 에너지, 주택 등 분야별 자문을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초점
 - 주로 산업·금융정책, 공항·항만 현대화전략 등 거시경제 및 SOC개발 관련 정책경험 제공
- 우즈베키스탄 대상 KSP는 ‘나보이 경제특구’ 설립,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사업화 정책 등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에 주력

□ 체제전환국에 대한 개발협력 진행시 지식공유를 활용한 지속가능개발 지원 및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에 집중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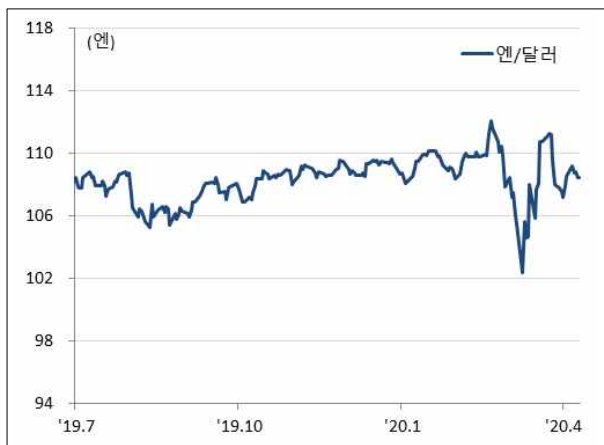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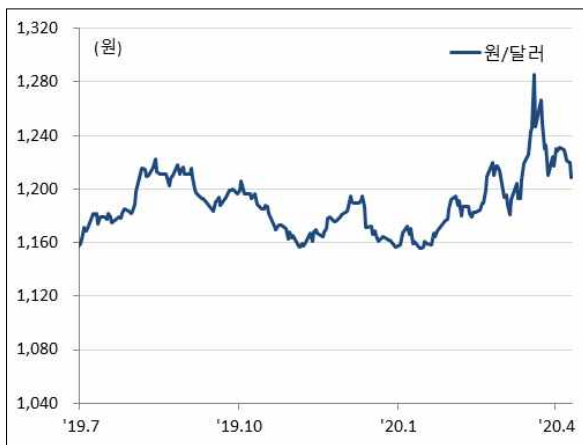
- 단순 지식·기술 이전에서 나아가 정책연구, 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제도구축 및 역량배양을 지원하여 지속가능개발 도모
 - 특히 대상국의 주인의식 제고 및 참여 확대, 공여국의 대상국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으로 개발협력사업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
- 협력대상국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국가개발전략 수립·실행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공여국-협력대상국 간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할 필요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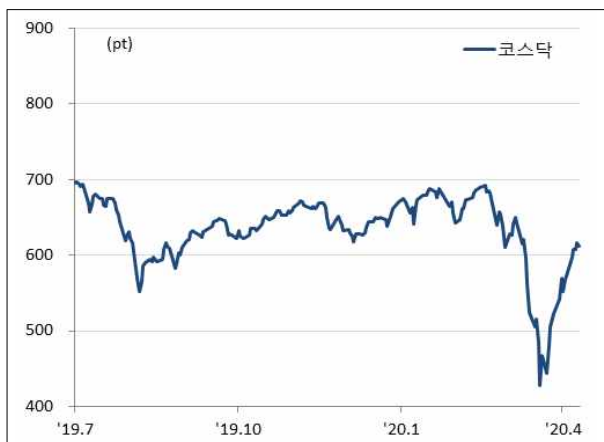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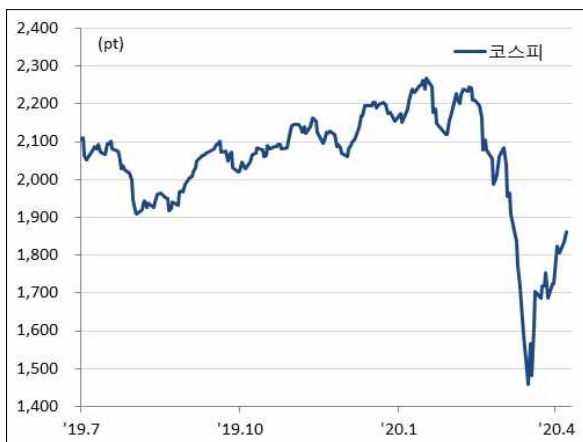
금리 국고채3년 0.97% (9.6bp ↓), 신용스프레드 71.3bp (7.6bp ↑)



환율 원/달러 1,208.8원 (22.1원 ↓), 엔/달러 108.47엔 (0.06엔 ↓)



주가 코스피 1,860.7pt (7.84% ↑), 코스닥지수 611.26pt (6.68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, 신용스프레드와 엔/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74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26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